

## 성명서



그 동안 우리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에 수없이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반영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작년 말 대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지난 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00명을 충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기가정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전문인력의 충원과 전달조직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결코 국민들

이 요구하는 근원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7,000여명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07년까지 7,500명을 충원하여 14,500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공약 발표하였다. 그러나 복지예산과 복지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 한 명도 증원을 시키지 않다가 업무의 폭주로 저소득 주민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심각한 실태가 되어 버리자 올 하반기에 1,8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06년에는 직무분석 결과를 통해 충원인력을 결정하되 담당인력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업무의 일부를 행정직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총량적으로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증원되면 그만큼 복지욕구도 수용되지 않겠냐는 안일한 생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자체 조직의 반발에 대한 부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행정직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업무만 담당하지 않는다. 채용당시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채용될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른 행정업무 영역으로 전보 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직도 사회복지업무가 기피업무이고, 타 업무영역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심이 높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인력운용의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를 하기위하여 충원한 행정직공무원의 타 분야 인사발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행정직으로 선발된 인력의 타 업무 종시는 시간의 문제로 결코 복지현장의 인력증강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는 지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장 먼저 축소된 분야가 사회복지관련 부서였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듯 각급의 인력증원 방식은 증원의 방법이 당초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없음이 명약관화 한데도 행정직 인력의 충원으로 국가의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조직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의 시군구·읍면동 전

#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라!


달체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엄청나게 늘어난 복지예산과 각종 복지정책을 읍면동에 배치된 1~2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모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70~80년대의 전형적인 단순 저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업무조정으로 현재의 공공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결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무소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반영

되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시킬 대안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현재의 인력과 조직체계로 실시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발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려는 정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라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채 일방적인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개선방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더 이상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제로 개선되길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임시방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근원적 개편을 실천하라!
1.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공약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500명 충원을 임기내 반드시 이행하라!
1.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닌 일반행정직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 인력으로 전원 공개 채용하라!
1.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범실시중인 사회복지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하라!

2005. 3. 29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 성 이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차 흥 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권 복 순